



변신원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 1. 들어가기

2018년 2월 청와대 앞에는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페미니즘 교육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등 여성단체가 페미니즘 교육의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과정에 성평등 내용 강화·교과서의 내용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학교의 제도의 관행을 성평등하게 개선 ▲온·오프라인에서 젠더폭력 예방 ▲지역 교육청에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 마련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성 세워나가기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 제정 ▲유아 및 어린이·청소년과 접촉하는 직군의 성평등 교육 필수 이수 ▲인권과 성평등 등이 ‘교육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 등의 내용이 정책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sup>1)</sup>

미투 운동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안을 교육으로 본 것이다. 21만 3,219명이 참여한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하여 답변에 나선 청와대는 “페미니즘 교육은 인권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통합 인권 교육을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sup>2)</sup>고 밝혔다. 이러한 의견 제시와 국가수준의 답변의 실행에 대한 평가는 향후 과제로 두고 이런 청원이 이루어진 배경과 교육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는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자.

2020년에도 역시 젠더이슈는 뜨거웠다. 이번에는 디지털 공간이었다. 당해년 초반 한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N번방 사건으로 속칭되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역시 디지털을 매개로 이루어진 손정우 사건에 대한 판결 등이 그랬다. N번방 사건 등

1) 박정훈 기자(2018.2.27.). “페미니즘 교육 받았다면 ‘미투 운동’ 할 일 없어.” 오마이 뉴스

2) 청와대(2018.1.6.).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

디지털을 매개로 한 성폭력은 최근 갑자기 발생한 신종 범죄가 아니므로 터져야 할 것이 터진 것이다. 청소년에 의해 이루어진 ‘빨간 마후라 사건’이나 1999년, 2000년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연예인 동영상 유출 사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100만의 성착취 영상물을 올렸던 소라넷 사건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사소하거나 예외적인 사건이었고 심지어 성차별적 문화가 극심했던 당시 사회에서 실존적 불안에 사로잡힌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받거나 연예인 활동을 접어야 했다.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여성의 성이 돈으로 교환되는 그리하여 거대한 금전적 이익을 얻는 현장을 목격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이 사건이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 사건으로 생각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인식의 한계, 잘못된 사회적 대응이 오늘날 디지털 성범죄 확장의 모태가 된 것이다.

휴대용 PC, 휴대전화 사용 등 각종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악플이나 사이버 명예훼손 정도였던 디지털 폭력은 사이버 스토킹(cyber stalking), 인터넷 성매매, 불법 촬영물 유포 등으로 옮겨갔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공격적 위협, 학대적 언어, 폄하적 이미지의 95%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온라인상 폭력을 가하기 적합한 대상이 여성임을 의미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성혐오 및 범죄는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여성의 낮은 지위, 여성의 성적 대상화 등과 연결되어 있으며 다양한 이유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된다. 여성 게이머는 보조

적 역할 수행 요구, 욕설, 모욕 등을 경험한다.<sup>3)</sup> 게임상 여성 캐릭터는 나이도 파워도 낮았으며 성적으로 대상화되어 표현되었다. 전략 게임 속에서 능력이 낮은 캐릭터에게 감정이입 될 리 없으므로 단지 시각적으로 대상화된다. 당연한 결과로 성적으로 묘사된 여성캐릭터를 이용해 게임할 경우 여성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저하된다.<sup>4)</sup> 디지털 공간에서 성폭력과 성착취가 자행되는 것은 이와 같은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

## 2. 왜 교육이 문제인가

모든 게 비판적인 것은 아니다. 최근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보면 2018년의 미투 사건 이후 시민의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되었음을 체감할 수 있다. 첫째, 디지털 성폭력을 포함한 젠더폭력이 사적이거나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일로 치부되지 않는다. 둘째, 성착취에 피해를 본 피해자를 명백히 피해자로 규명하고 피해자 보호의 담론을 확실히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및 영상물 삭제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을 해왔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는 영상물 유포가 확실하지 않지만, 유포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두려움에 시달리는 상황을 ‘불안 피해’로 이름 붙여 지원하고 있다.<sup>5)</sup>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그룹이 많아지고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가는

3) 맹옥재 · 김혁 · 우준희 · 허영진 · 이서영 · 최지원 · 이상욱 · 은진수 · 이경진 · 이준환 (2018). 온라인 게임내 성차별 실태 조사 및 제재 시스템 디자인 연구.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4) 이창섭 · 이현정(2018). “4차 산업사회에서 게임산업의 사회 및 문화적 쟁점.” 한국게임학회

과정에서 다른 한편으로 여성혐오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1) 디지털 성범죄를 놀이로 이해하는 사람들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자 성폭력 사건이 그렇듯이 피해자를 의심하고 악플과 협박을 가하는 등 2차 가해가 이루어진다. 변화의 과정에 백래시와 혐오, 갈등이 부각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이제 겨우 자신이 피해자임을 인식하고 피해를 벗어난 안전한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즉각적으로 혐오 발언으로 대응하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성인 지 감수성의 확장이 전보다 더 각박하고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들었고, 지나치게 삶을 피곤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9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 1위 ‘가해자 처벌 강화’, 2위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등 대부분의 응답자가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꼽았다.<sup>6)</sup> 반면 처벌 현황을 보자. 2018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219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음란물을 제작·유통·소지한 성범죄자 42명 중 48.9%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평균징역형량은 통신매체이용음란 10개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 1년 2개월(17년, 11개월)이었다.<sup>7)</sup> 2016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세계 128만

명의 회원에게 22만여 개(8TB)의 음란물 동영상을 올렸고 이를 수입으로 삼은 손정우는 18개월 형을 받았다. 반면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들이 징역 5~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에서는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였으나 한국은 거부했다.<sup>8)</sup> 성범죄를 대하는 사법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 영상물 범죄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판단에 확신을 줄 수 있다. 현행법 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무기징역’이다. 그런데 설문에 응답한 판사 668명 중 가장 많은 211명(31.6%)이 기본 양형(가중·감경을 배제한 양형)으로 ‘3년형’을 꼽았다.<sup>9)</sup> 가해자 처벌 수위가 낮은 가장 큰 원인은 결국 판사들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었다.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는 어떤가? N번방 사건이 터지자 국민들은 국민동의청원으로 ① 경찰의 국제공조조사, ② 수사기관 내 디지털성범죄전담부서 신설, ③ 양형기준 재조정 등을 요구하였다. 국회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을 일부 개정해 단지 ‘딥페이크’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축소·정리하고 관련 법개정을 하였다고 발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들과 고위 공무원들은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 것이냐”,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공분을 샀다.<sup>10)</sup>

5) 신혜정 기자(2019.12.27.). “동영상 유포 협박에 잠 못 자는 ‘불안 피해’ 여성 도와요.”, 한국일보

6) 여성가족부(2020).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7) 여성가족부(2020).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이뤄져, 정책뉴스

8) 최선율(2020.7.7.). 손정우 판결에 외신도 비판...“대법관 안된다” 청원 30만(종합), 서울신문

9) 조운영·장예지 기자(2020.4.24.). 아동 성착취물 제작, 3년형이 가장 적당하다는 판사들, 한겨레신문

10) 심윤지 기자(2020.3.14.). “예술작품이라 생각하고 만들 수 있지 않냐” 딥페이크 처벌법 만든 고위공직자들의 안이한 현실인식, 경향신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미투가 이어지자 비서를 남자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온다. 이러한 주장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남자 자치단체장이 연령이 낮은 여자비서의 조합이 기존의 성역할 및 사회적 지위 등을 보여준다는 본질적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팬스를 적용이라는 낮은 대안을 제시한다. 은근히 이래도 미투를 할 것이냐 하는 얇은 피를 부리는 것이다.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한 번도 여성이 당선된 적 없으니 여기에서 여성이 당선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하면 자치단체장의 특권의식이 줄어들 것이라는 대안을 말하면 즉시 ‘여차피 여성은 나가도 당선 안 된다’는 편견에 찬 답변이 돌아온다. 성평등은 때에 따라 의지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임에도 과거의 프레임을 정답처럼 들고 나온다. 법조인,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왜곡된 성인식은 일반인의 의식을 오히려 낙후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반전의 통계 결과가 있다. 2018년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미투’ 운동 관련 사회 전반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지지자가 88.6%에 이르렀고 성별 차이도 거의 없었다. 2020년 8월에 세계일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투 운동에 대해 ‘지지한다’에 91% (매우 지지 69.5%, 약간 지지 21.5%)가 동의했다. ‘본인의 성인지 감수성이나 언행,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84.9%가 ‘그렇다’고 답했다. 성폭력을 공론화한 후 겪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매우 심하다’는 응답이 55.8%로 가장 많았고, ‘약간 심하다’ 30%, ‘보통이다’ 10.6% 순으로 답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계결과에도 불구하고 백래시, 혐오, 팬스를 등을 떠올리며 이와 같은 현상에 제동을 걸 것을 요구하는 발언들이 일상의 담론을 지배하는 현상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91%의 사람들이 성폭력 근절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해자가 발언하기 용이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성폭력 근절의 의지가 있는 91%의 시민들도 내재화된 성고정 관념에 대한 성찰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과거 등을 문제 삼는 등 피해자를 문제 삼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들으면 이에 설득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논리구조의 취약을 호소한다. 결국 교육을 통한 전국민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타겟집단을 고려한 맥락적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즉, 전국민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이 답인 것이다.

## 2) 성인지 교육 실태와 학교 현장

### 가. 폭력예방 통합교육의 효과와 한계

2016년 5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정(시행 '16.11.30.)으로 공공기관 등의 성폭력 예방조치 의무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 의무가 강화되었다. 이는 1999년부터 시작된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풍부히 하며 성폭력을 젠더폭력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sup>11)</sup> 그간 여

11) 폭력예방통합교육 시행의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부정적 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의 젠더 지형을 변화시키고 2018년의 미투의 추진력을 이끌 수 있는 인식의 바탕에는 교육의 힘이 컸음을 인정해야 한다. 성을 매개로 한 폭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투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번져갔다. 과거에는 관행이었던 업무상 상급자에 의한 성적 침해는 범죄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분위기는 쉽게 조성된다. 명백한 성폭력 가해자가 여전히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도 했다. 미투 이후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몫은 너무 컸다. 법과 제도, 사회 질서 전반에 자리 잡은 성폭력에 대한 통념의 두께는 너무 크다. 문제는 각각의 분절된 폭력예방교육이 아니라 성별화에서 비롯된 권력과 힘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것이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생산된 성역할 수행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공감하는 것,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 즉 젠더 트레이닝(gender training)<sup>12)</sup>이 필요한 것이다.

## 나. 학교현장에서의 젠더 수행성

그렇다면 성평등 교육의 수행은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해야 할 것인가. 성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이전의 시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인간이 성장하면서 성고정관념은 가족, 대중매체, 또래친구, 학교 등을 통해 습득된다. 이 중 국가에서는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 실시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차별하지 않는 인간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00년에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은 여전히 성차별적 관행을 견어 내지 못하고 있다. 2002년 여성부 신설로 성교육에 성평등이라는 목표가 추가되었다.

김수자(2019)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는 여전히 성차별적·성별화된 공간이며 젠더규범을 재생산하는 기제가 작동하는 곳이다. 학교는 교사의 태도, 생활지도, 교칙, 규정, 교육환경 등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젠더규범과 성역할을 내면화시킨다. 동일 논문에서 여자 중·고등학교 교훈과 남자 중·고등학교 교훈 사례를 비교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sup>13)</sup>

하여 실시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8. 9. 28.] /기타 폭력예방교육관련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 성희롱 예방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
|---------|--------------------------|----------------------------|----------------------------|-------------------------------|
| 현행 근거법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 시 기     | 1999년                    | 2004년                      | 2010년('11.1월 시행)           | 2006년                         |
| 대 상 기 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 초·중·고교                     | 초·중·고교                     | 초·중·고교                        |

12) 유엔기구나 OECD, 유럽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젠더폭력관련 교육훈련은 국제개발정책에 개입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젠더에 관한 '의식, 지식, 기술, 행동(사업) 전반을 변화시키기 위한 '성평등 교육훈련(training for gender equality: UN WOMEN)'은 최근 기존의 성인지 교육 훈련'의 일환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함. 이는 1990년대 전후로, 여성인권과 성평등 실현이 국가와 세계발전의 주요 목표이자 수단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부터임. 여성/젠더폭력을 포함하여 보건, 인권 등 젠더트레이닝의 핵심 주제들과 관련된 기본개념과 그 방법론은 1970년대 이래 서구 선진국에서 발전한 경제발전이론, 페미니스트 이론, 문화인류학, 교육학 등의 상호교차적 영향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음. 변신원·강선미 외(2018), 폭력예방통합교육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3) 김수자(2019). 학교현장에서의 페미니즘 교육실천 현황과 과제 - 성평등한 공간, 성평등한 주체를 위하여. 교육비평



〈표 1〉 여자/남자 중고등학교 교훈 사례 비교

| 여자 중·고등학교 교훈 사례   | 남자 중·고등학교 교훈 사례   |
|---|---|
| 사랑-용서한다, 참는다, 도와준다, 희생한다,<br>참된 일꾼, 착한 딸, 어진 어머니, 거래의 발,<br>아름다운 女性, 경건한 여성이 되자, 작은 일에 충성하자,<br>부덕을 높이자, 슬기롭고 알뜰한 참여성 | 꿈을 키우자, 땀을 흘리자, 참을 배우자,<br>개척, 협동, 애족, 하면 된다, 창조적인 사고,<br>자주적인 행동, 강인한 체력, 스스로 배우고,<br>몸소 행하며, 힘차게 앞서자, 자주 자립 |

위의 교훈 사례를 보면 여학교의 경우 수동화, 축소, 성적 대상이라는 ‘틀’에, 남학생의 경우 적극성, 확장, 자주라는 ‘비전’에 무게중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히 교사의 태도와 교과과정에도 이와 같은 인식은 반영될 수밖에 없다.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여자는 ‘조신해야지’, ‘단정해야지’, ‘예뻐야지’와 같은 말에, 남자는 ‘씩씩해야지’, ‘용감해야지’, ‘대범해야지’와 같은 말에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학교 내 차별적 현상이 스쿨 미투로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현재 교과수업으로 성평등교육은 범교과학습을 통해 수행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성평등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학교 운영체계, 교훈, 교사의 의식 전반이 지닌 낮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하여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3. 왜 교육이 대안인가

#### 1) 학교 내 성평등 교육

이상에서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성교육 표준안을, 여성가족부에서는 성 인권 교재를 개발하

는 등의 노력을 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은 성차별적 고정관념 강화, 가해자 중심 성폭력 서술,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행동지침 강조 등이 널리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수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 이미 2009년 유네스코(UNESCO)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International Guidelines on Sexuality Education)’을 통해 ‘젠더 편견에 따른 사회적 관행과 폭력, 젠더 불평등이 강화되는 방식에 대해 가르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성적 자기 결정권’은 아동·청소년에게도 예외가 아닌 인간의 기본권으로, 아동·청소년의 경우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자 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함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성 인지 감수성을 함양하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성장도 강조하였다. 또한 “포괄적인 성교육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성적·사회적 관계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상호존중, 평등과 같은 민주적 가치를 강화하는 것을 제1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성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현재까지 교육을 운영하는 중이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4)</sup>

14) 여성가족부(2019). 학교 성인권 교육 운영 안내서

〈표 2〉 학교 성 인권 영역별 교육내용

| 영역     | 내용   |
|--------|--|
| 성 인권   | 성 인권은 성적 주체로서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고 자신과 타인의 권리 존중에 근거한 인권감수성을 높여 성적 주체로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존중을 실현할 수 있는 인성을 기르는 교육내용으로 구성  |
| 성평등    | 성 평등은 성별고정관념을 점검하고, 그 안에서 생산되는 성차별을 깨달으며 이를 비판적으로 인지하며 대안을 생각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성 평등한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내용으로 구성                 |
| 관계와 소통 | 인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의사소통의 문제를 성인지적으로 점검하며 인간사회에서 공존하는 방법을 관계와 소통의 영역에서 체험함으로써 존중과 배려를 할 수 있는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내용으로 구성 |
| 성적인 위험 | 아동·청소년은 성적 주체로서 안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주변의 성문화와 환경을 점검하고 성적인 위험에서 안전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으로 구성                       |
| 체험활동   | 성적인 존재로서의 몸 이해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체험형 성교육내용으로 구성됨   |



〔그림 1〕 학교 성 인권 영역별 교육내용

성인권 교육의 교육만족도가 높으며,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체계 및 예산의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sup>15)</sup>

## 2) 페미니즘 페다고지 방법론과 평등의 성찰

디지털 성폭력은 성를 매개로 한 성폭력으로 우

리 사회의 성폭력은 성차별 및 성적 침해를 공고화하는 비정상적 가부장적 권력이 그 중심에 있다. 이른바 장학선 사건이라 불리는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등이 그것이다. 그들은 비정상적, 가부장적 권력을 특권으로 유지하기 위해 카르텔을 만들고 주변세력을 착취한다. 이들은 성, 인권, 노동, 자본 모두를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다.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15)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2019). 사업결과보고

사건은 이와 같은 착취 행태가 남성일반 뿐 아니라 청소년에까지 영향을 미쳐 성착취 대상을 ‘노예’로 부르며 그들의 고통을 유희화했다. 이러한 현상에 착안하여 관점을 확대한다면 젠더로부터 출발하여 소수자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시키는데 관심을 더 많이 둔다.

페미니즘 페다고지는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의 비판적 페다고지의 철학과 맥을 같이 하되 젠더의 문제에 중심을 두어 젠더, 인종, 계급을 동일한 억압의 구조로 파악하고 이들의 상관관계와 연대적 사회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교육의 최종 목표로 ‘인간화(humanization)’를 강조한 점, 학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을 강조한 점, 그리고 의식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삶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대화를 통해 비판의식을 일깨우는 점 등은 페미니즘 페다고지와 같은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 방법론이다. 이의 일환으로 탈 권위의 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교수자와 학습자가 평등하게 맺어지도록 하고 이 양자는 모두 자신이 속한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촉진자가 되는 것이다.<sup>16)</sup>

디지털 환경을 되돌아보면 오프라인에서의 약자에 대한 혐오와 성적 대상화가 유희와 자본으로 치환되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여 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은 교육이다. 디지털 성폭력 사건은 일반인으로부터 시작해 법조계,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살필 수 있었다.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차별 문제를 시정해 갈 수 있는 인지력 향상을 위한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간 여성가족부가 주도해 온 폭력예방교육이 한국사회 젠더폭력에 대한 성인지적 이해와 폭력 민감성을 높여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이 분절적이어서 비정상적인 권력으로서 가부장적 특권의식을 제대로 문제 삼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보다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교육의 최종목표는 소수자의 입장, 다양한 층위에서의 타자화를 극복하고 인간화를 이루는 교육으로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며 궁극의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지향점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 목표에 근거하여 교육 대상의 수준과 요구에 맞게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고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향후의 과제이다.

#### 4. 마무리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자 관계의 양상과 폭력의 양상이 모두 변화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경험은 인간의 삶에 디지털의 개입을 급속도로 높여갈 것이다. 디지털은 인간 사회 구조를 반영하고 확장한다.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통해 우리의 디

16) 배유경 (2018). 여성학/주의 교육을 위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전략 탐구. 페미니즘 연구



### • 참고문헌 •

- 김수자 (2019). 학교현장에서의 페미니즘 교육실천 현황과 과제 - 성평등한 공간, 성평등한 주체를 위하여, 교육비평  
맹옥재, 김혁, 우준희, 허영진, 이서영, 최지원, 이상욱, 은진수, 이경진, 이준환 (2018). 온라인 게임내 성차별 실태 조사  
및 제재 시스템 디자인 연구,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 박정훈 기자(2018.2.27.). “페미니즘 교육 받았다면 ‘미투 운동’ 할 일 없어”, 오마이 뉴스
- 배유경 (2018). 여성학/주의 교육을 위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전략 탐구, 페미니즘 연구
- 변신원, 강선미 외(2018).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신혜정 기자(2019.12.27.). “동영상 유포 협박에 잠 못 자는 ‘불안 피해’ 여성 도와요.”, 한국일보
- 심윤지 기자(2020.3.14.). “예술작품이라 생각하고 만들 수 있지 않냐” 답페이크 처벌법 만든 고위공직자들의 안이한 현실  
인식, 경향신문
- 여성가족부(2019). 학교 성인권 교육 운영 안내서
- 여성가족부(2020).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20).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이뤄져, 정책뉴스
- 이창섭, 이현정(2018). “4차 산업사회에서 게임산업의 사회 및 문화적 쟁점”, 한국게임학회
- 조윤영·장예지 기자(2020.4.24.). 아동 성착취물 제작, 3년형이 가장 적당하다는 판사들, 한겨레신문
- 청와대(2018.1.6.).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
- 최선율(2020.7.7.). 손정우 판결에 외신도 비판…“대법관 안된다” 청원 30만(종합), 서울신문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9). 사업결과보고